

인여러분, EU 돼지가
포커스

망국적 한·미 FTA 비준 결사 반대한다!

농대위, '한·미FTA저지,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 개최



한·미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이하 농대위)는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47개 단체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저지,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농어업의 피해를 전제로 추진되는 한·미FTA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대위는 “대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민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에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라며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FTA 비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선회한 것은 국민기만용 선거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농대위는 이어 “비료값과 사료값 등 전반적인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농업진흥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관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

고 주장했다.

윤요근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미FTA로 인해 농민들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나 농민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식량주권 말살하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폐지 등 농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사료 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줄도산하고, 농민들은 사료를 살 돈도 없어 자식 같은 가축을 굶기고 있다”며 “IMF 때는 경제가 살면 농업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FTA 비준을 줄속으로 처리하여 국내 농업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실패의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농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 한·미 FTA 비준 줄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돈**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는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인수위 농민 기만말라” 목소리 높여



전국 농민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및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총궐기대회가 지난 1월 28일 서울 국회 앞 여의도 공원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하고 “탁상공론, 후안무치적 발상인 농촌진흥청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농촌진흥청 폐지를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임도 전에 농민들을 기만했다”며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는 즉시 해체하라”고 성토했다.

농진청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떠넘길 경우 일선 농촌지도조직

과 연계가 약화되어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제논리에 따라 소수 특정분야에만 연구가 치중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따라서 농진청 기능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술농업이 시장개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진청이 존속,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 농진청 글자가 그려진 모형에 불을 지르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농진청 폐지를 주장하고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등 강경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1일 농진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여야 합의로 잠정 유예됨에 따라 폐지위기를 넘겨 향후 진행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동**